
2021년 경제정책방향

주요 내용

2020. 12. 17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2020년 경제정책 평가	1
II. 2021년 경제여건 점검	4
III.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	7
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】	
1.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	8
2.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	10
3.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	12
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】	
4.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	15
5. 안정·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	18
6. 경제구조의 포용성·공정성 강화	21
IV. 2021년 경제전망	24
[부록]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한 2021년 실행계획	25

I. 2020년 경제정책 평가

- ◇ '20년은 미증유의 **글로벌 팬데믹**에 따른 **보건·경제위기**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**극심한 경기침체**와 **구조적 전환**에 직면했던 한해
- 우리 정부도 ① **당면한 피해극복**과 **경기회복**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② **체질개선** 및 ③ **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**를 위한 정책노력 병행

1 당면한 피해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

- (대응)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4차례 추경 포함 **310조원** 규모의 **전례없이 과감한 지원대책** 추진

총 310조원 규모(GDP 16% 수준) 지원대책 마련

실물지원 대책 : 89조원	금융안정 대책 : 229조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1~3단계 종합패키지 (32조원) : 업종·분야별 대책/민생·경제종합대책/1차 추경 ✓ 긴급재난지원금 등 (15.2조원) : 긴급재난지원금(2차 추경)/사회보험료 감면 ✓ 고용안정패키지 (10.9조원) : 고용안정 특별대책/고용유지지원금 등 ✓ 하경정 및 3차 추경 (9조원) ✓ 긴급 민생·경제 종합대책/4차 추경 (12조원) ✓ 기타 (10조원) :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/업종·분야별 긴급지원 중소·중견기업 비용부담 경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금융안정패키지 (135조원+α) : 1단계 130조원+α/추가확대 35조원 ✓ 기간산업안정기금 (40조원) ✓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가확대 (4.4조원) ※ 소상공인 총지원규모: 1단계(16.4조원) + 2단계(10조원) ✓ 하경정 및 3차 추경 (12조원) ✓ 긴급 민생·경제 종합대책/4차 추경 (4.8조원) ✓ 기타 (33조원) : 수출기업 보증보험/벤처·스타트업 용자·보증/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 확대 등

※ 310조원 = 89 + 229 - 8 (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중복분 차감)

※ 대출·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시 총 570조원(GDP의 1/3 수준)

- (평가) K-방역체계 구축, 과감한 정책대응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“**위기에 강한 경제**”를 다시 한 번 입증

① (경제성장률) 어려운 여건 속에서 **상대적으로 적은 투입**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위기 이전 수준으로 **가장 빠르게 회복중**

* 코로나 대응 재정투입 규모(GDP 대비 %, IMF<10월>) : (G20 평균)6.6 (韓)3.5<G20중 13위>

* '20.3/4분기 GDP 규모('19.4/4 = 100) : (韓)**97.5** (美)96.5 (日)96.1 (獨)96.0 (英)90.3

- 금년 성장률도 **OECD 국가중 1위**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우리나라 **경제규모**는 작년보다 **2단계 오른 세계 10위**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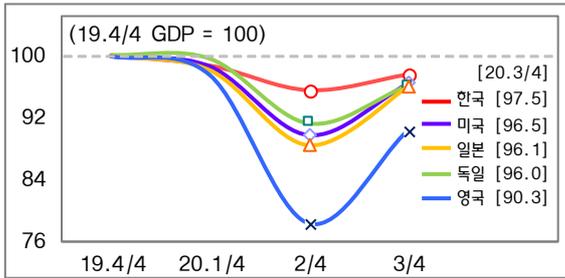
* '20년 성장전망(% OECD<'20.12>) : (韓)**△1.1<1위>** (美)△3.7 (日)△5.3 (獨)△5.5 (佛)△9.1

* 한국 경제규모 세계 순위(IMF<'20.10>) : ('14) 12 ('15~17) 11 ('18) 10 ('19) 12 ('20) **10위**

② (수출) 극심한 글로벌 교역 위축 속에서도 반도체·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방하면서 세계 7위 수출국의 위상 공고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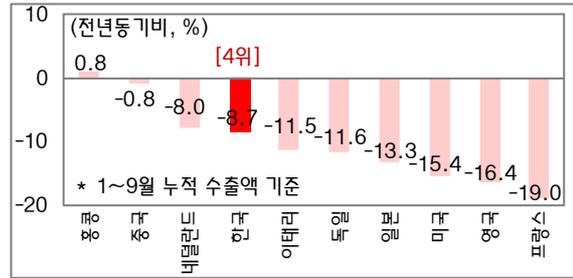
* '20.1~9월 누적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은 홍콩·중국·네덜란드에 이어 4위

주요국 GDP 실적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/블룸버그

세계 10대 수출국의 '20.1~9월 수출



* 출처 : WTO

③ (고용) 적극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

* '20.1~10월 고용지표 변동

지표	한국	일본	독일	이태리	캐나다	미국
취업자 증감률(% , 전년동기비)	△0.6	△0.7	△0.8	△2.0	△5.7	△6.3
실업률 상승폭(%p, 전년동기비)	+0.1	+0.4	+1.0	+0.8	+4.0	+4.6

④ (금융시장) 흔들림 없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강한 회복력 유지

- * ①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(中·日 보다 상위), ②국가부도위험(CDS 프리미엄) 최저 수준,
- ③외환보유액 안정적 관리('20.11월말 4,364억불, 글로벌 금융위기 2,012억불/외환위기 332억불),
- ④'20.9.10일, 외평채(14.5억불) 사상 최저금리(달러화) 및 마이너스 금리(유로화) 발행 등

2 체질개선 노력

□ (대응) 위기상황 속에서도 혁신 확산·포용 강화 등 체질개선 노력도 소홀함 없이 착실히 진전

- (혁신확산) DNA·BIG3 등 신산업 육성,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,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업 스마트화, 규제혁신 등 차질없이 추진

* DNA(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) / BIG3(바이오헬스·미래차·시스템반도체)

- (포용강화)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·소득 지원 노력 강화(취약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등)

혁신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대응

신산업	✓ 데이터3법(2월) 및 시행령(8월) 개정 ✓ 바이오산업 혁신(1월) / 사업화 촉진(11월) ✓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(12월)
벤처	✓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(2월) ✓ 스타트업 파크 선정(9월, 대전·천안)
제조업 서비스업	✓ K-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(8월) ✓ 디지털기반 산업 혁신전략(8월)
규제 혁신	✓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(4월) ✓ 기업부담 완화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(9월)

포용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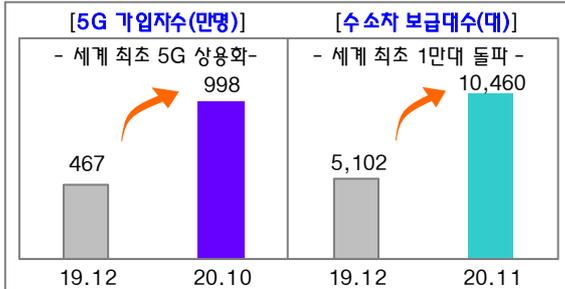
고용유지 고용안정	✓ 직접일자리 155만개 제공(본예산+추경) ✓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✓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✓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✓ 청년추가고용장려금/내일채움공제 확대 ✓ 신중년·노인·여성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
안전망 강화	✓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적용대상 확대 ✓ 특수고용직 5개 직종 산재보험 가입 ✓ 「제2차 기초생보 종합계획」 수립(8월)

□ (평가)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**혁신확산 분위기**를 이어가고 있으며, **코로나 위기로 더욱 도드라지는 소득 격차를 최대한 완충**

* 벤처펀드 규모 및 기술창업 증가세 지속, 5G/수소차 등 신산업 수요 급증 등
 ▶ 벤처펀드 결성액(천억원, 1~3분기): ('19) 24.9 → ('20) 26.5 / 기술창업(만개): ('19) 16.6 → ('20) 17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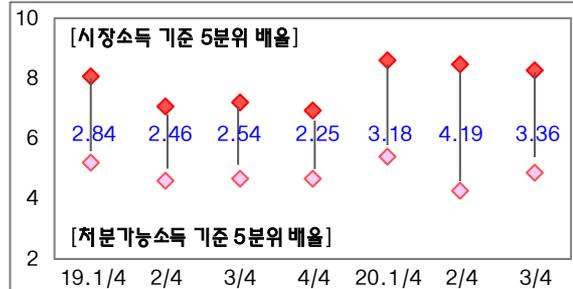
*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(시장소득 -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) 확대

5G·수소차 등 신산업 수요



* 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환경부

정책의 분배개선 효과



* 출처 : 통계청

3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

□ (대응) 코로나 위기에 따른 **디지털/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**에 대응, 새로운 **국가발전 전략**인 「**한국판 뉴딜**」 추진

○ **한국판 뉴딜 종합계획**(7.14일) 및 **3차례** 걸친 **후속조치** 마련
 → '25년까지 **160조원**(국비 114조원) 투자, **일자리 190만개** 창출

* 뉴딜펀드 조성·지원방안(9월)/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(10월)/추진상황 및 체감확산 전략(11월)

○ 즉시추진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들부터 **추경**을 통해 **신속 착수**

3차 추경 뉴딜사업<4.8조원>

디지털뉴딜 : 2.4조원	그린 뉴딜 : 1.2조원	안전망 : 1.2조원
✓ DNA 생태계 강화	✓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	✓ 고보 사각지대 생활·고용안정
✓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	✓ 스마트 그린도시/상하수도	✓ 미래적응형 직업훈련
✓ 비대면 서비스·산업 육성	✓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	✓ 산업안전·근무환경 혁신
✓ SOC 디지털화	✓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구축	✓ 고용진입·전환지원

□ (평가)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**구조적 대전환** 과정에서 **우위 선점**을 위해 **글로벌 경쟁 심화에 선제 대응**

○ **국제사회**에서도 우리의 「**한국판 뉴딜**」 전략을 **높게 평가**

* (OECD<'20.8>) : 디지털·그린·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·포용적 경기회복 기대

☞ '20년은 K-방역체계 구축하에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

II. 2021년 경제여건 점검

1 경기 여건

① (내수) 금년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겠으나, 제약요인 상존

○ 소비는 정부의 소비지원 확대, 가계의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여력 증대,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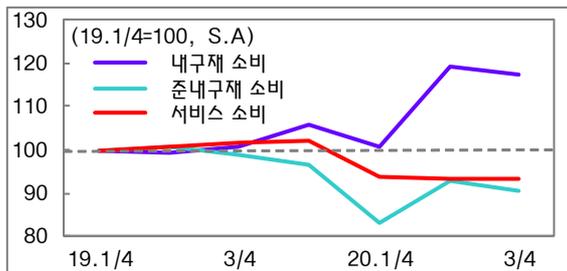
- * 소비활력 제고 관련 예산 규모(조원) : ('20) 0.7 → ('21) 2.1 <전년대비 3배>
- * 가계 저축률(%), 가계동향조사, 1/4~3/4 평균) : ('19) 27.5 → ('20) 32.0 <전년동기비 +4.5%p>

▪ 다만,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 등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

○ 투자는 설비투자가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, 건설투자도 SOC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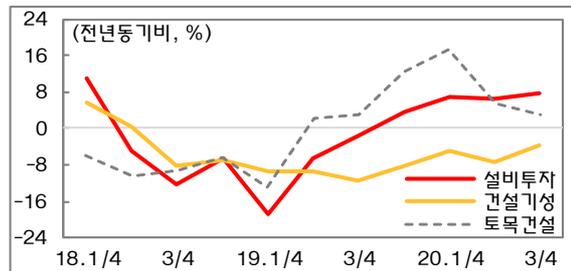
- * 반도체 매출 증가율(%), WSTS<'20.12월>) : ('19)△12.1 ('20^e)+5.1 ('21^e)+8.4
- * SOC 예산(조원) : ('20) 23.2 → ('21) 26.5 <전년대비 +3.3조원>

행태별 소비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설비투자 및 건설기성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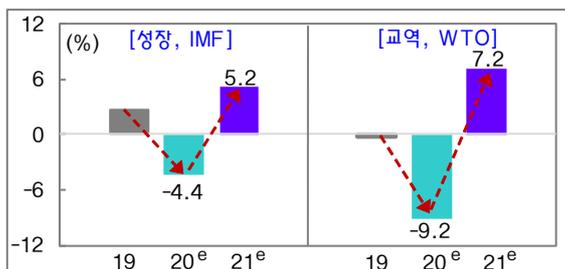
② (수출) 글로벌 경기·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 예상

○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면서 반도체, 전기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 지속 전망

- 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0.1/4)△1.8 (2/4)△20.3 (3/4)△3.4 (10)△3.8 (11)4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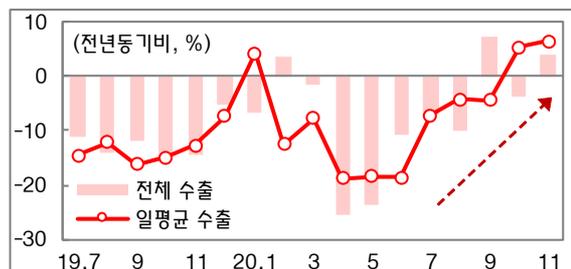
○ 다만,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상존

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전망



* 출처 : IMF, WTO

수출 및 일평균 수출 추이



* 출처 : 관세청

① [고용] 증가 전환이 예상되나,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

- 내수 및 제조업 경기 개선,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고용 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

* 일자리 예산(조원) : ('20) 25.5 → ('21) 30.5 <전년대비 +5.0조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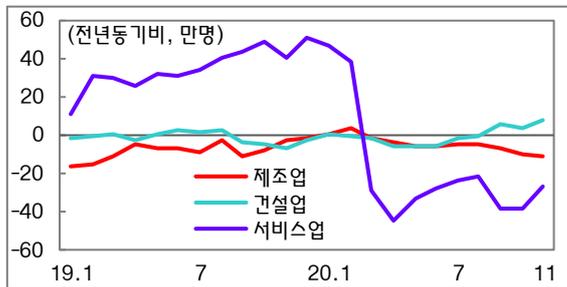
↳ 직접일자리 지원규모(만개) : ('20) 94.5 → ('21) 104.2 <전년대비 +9.7만개>

- 다만,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,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 등으로 고용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

* 위기 이후 통상 회복 속도는 고용이 경기에 약 6개월~1년 정도 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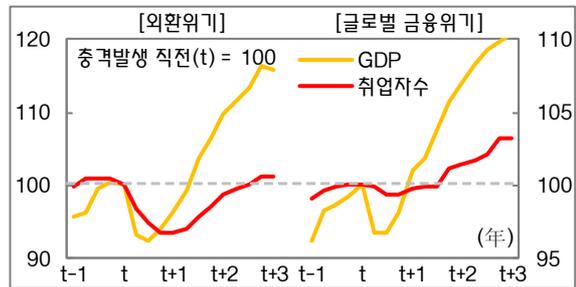
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) : ('19) △5.6 → ('20^e) △23.1 → ('21^e) △22.5

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과거 위기시 경기·고용 회복 경로



* 출처 : 한국은행, 통계청

② [분배]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, 경기·구조적 어려움 지속

-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효과는 분배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
* 보건·복지·고용 예산(조원) : ('20) 180.5 → ('21) 199.7 <전년대비 +19.2조원>

- 다만, 취약계층 고용 부진 지속 가능성, 고령화 심화 및 온라인 판매 증가 등은 1분위 등의 소득 개선을 제약할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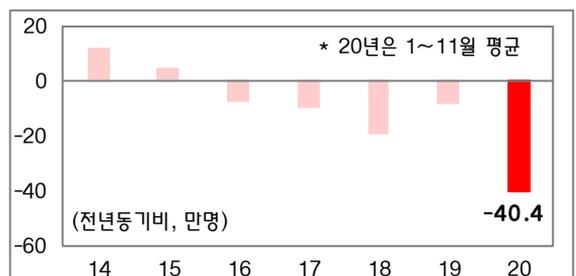
* 임시·일용직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19)△8.7 ('20.上)△45.6 (3/4)△39.3 (10)△32.0 (11)△20.7

주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 규모(조원)

	'20→'21년
4대 사회안전망 확충	41.9 → 50.5
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	16.5 → 20.1
기초연금 확대	13.2 → 15.0
장애인활동지원 확대	1.3 → 1.5
노인일자리 확충	1.2 → 1.3

* 출처 : 기재부

임시·일용직 일자리 증감



* 출처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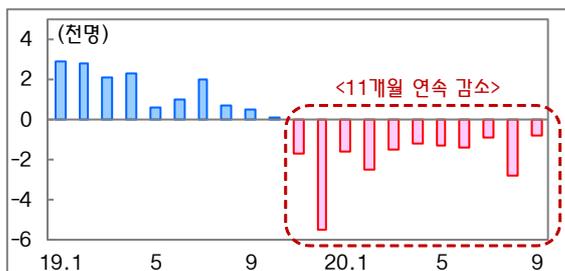
① [글로벌] 디지털 및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- 온라인소비·스마트워크·원격교육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화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상위 선점 경쟁이 심화
 - * (美) 바이든 정부는 5G·AI·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3천억불 투자 공약
 - * (EU) AI 산업에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투자 예정
 - * (中) 5G·데이터 등 新인프라에 '25년까지 1.2조위안 투자 예정
- 각국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안정·지속 성장을 위해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강화
 - * (美)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4년간 2조불 투자 공약
 - * (EU) '50년 넷제로를 목표로 그린딜 추진중 (30년까지 年 1천억유로 이상 투자)

② [국내] 인구·가구·지역 등 경제·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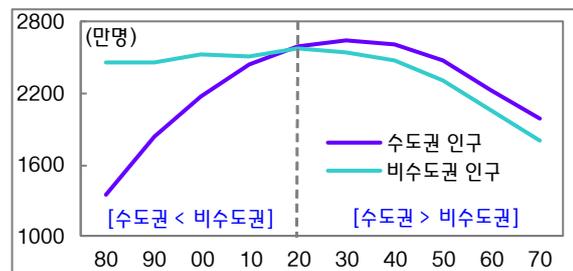
- 인구 자연감소 등 인구 충격 본격화, 1인 가구 비중 및 세대·가구 분화 급증 등이 소비·산업·주거 트렌드의 근본적 변화 촉발
 - * 1인가구 비중(%) : ('00)15.5 ('05)20.0 ('10)23.9 ('15)27.2 ('20°)30.3
 - * 서울시 세대수 증가율(%) : ('17)0.4 ('18)0.8 ('19)1.4 ('20.1/4)1.5 (2/4)1.7 (3/4)2.0
- 금년은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지역 인구를 넘어서고, 향후로도 수도권 인구 집종의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 확대
 - * 수도권 인구(만명) : ('00) 2,175 ('10) 2,443 ('20°) 2,596 ('30°) 2,648 ('40°) 2,615
 - 지역 인구(만명) : ('00) 2,526 ('10) 2,512 ('20°) 2,582 ('30°) 2,545 ('40°) 2,471

인구 자연증감(출생아수-사망자수)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수도권·비수도권 인구 추이·전망



* 출처 : 통계청

◇ 내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,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·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

- * 금년말~내년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시작, 하반기중 백신 상용화 예상
→ 내년 상반기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진행, 하반기중 코로나 진정 및 경제활동 본격 회복 전망

☞ 내년에는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,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(잠재성장률)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필요

Ⅲ.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

2021년 경제정책 목표



3 + 3 정책 방향

- Post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약 -

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

①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

- 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
- ② 경제·방역간 균형 도모
- ③ 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

②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

- ①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
- ②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·확산
- ③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·강화

③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

- 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
- ②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
- ③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
- ④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(지역균형뉴딜)

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

④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

- ①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(디지털 뉴딜)
- ② 벤처·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
- ③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
- ④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

⑤ 안정·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

- ①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 전환(그린 뉴딜, 탄소 중립)
- ② 사람투자·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
- ③ 재정·공공·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
- ④ 인구감소·저출산 대응 강화

⑥ 경제구조의 포용성·공정성 강화

- ① 고용·사회 안전망 확충
- ②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
- ③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
- ④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

Post
코로나시대
빠르고
안정적인
이행과
확실한 도약

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

디지털 뉴딜

그린 뉴딜

안전망 강화

지역균형 뉴딜

집중적인 재정투자

민간자본 활용(뉴딜펀드 등)

신속한 법·제도 개선

◇ **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적극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, 경제·방역간 균형도 도모하면서 경제 운용**

【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】

- ① **재정정책 확장기조**를 지속하고, **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** 추진('20년목표 62% → '21년 63%)
 - * '21년 예산안 총지출 558.0조원('20년 본예산 512.3조원 대비 8.9%)
 - * 상반기 집행목표(%) : ('17) 58.0 ('18) 58.0 ('19) 61.0 ('20) 62.0 ('21) 63.0
- **지방재정도 조기집행(60%)에 집중하면서 필요시 추경편성 독려**
 - * 상반기 집행목표(%) : ('17) 56.5 ('18) 57.0 ('19) 58.5 ('20) 60.0 ('21) 60.0
- ② **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,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 노력 지속**
 - * 정책금융(조원) : ('18) 408.6 ('19) 435.5 ('20) 478.8 ('21) 494.8
- ③ **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·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** 추진
 - **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**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, 질서있게 단계적으로 추진
 - **다만,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·CP 매입, 무보·수은의 보험·보증·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** 추진
 - * ①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 추진(~'21.1월 → ~'21.7월)
 - * ②무보 수출보험·보증 및 ③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만기연장('20.12월 → '21.6월)

【경제·방역간 균형 도모】

- ① **최대 4,400만명분¹⁾의 해외백신 先구매** 및 세부 접종전략 등 **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**하면서 **국내 치료제·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 구축²⁾**
 - 1) 코박스 퍼실리티(약 1,000만명분) 및 글로벌 백신기업(약 3,400만명분)
 - 2) 생활치료센터내 임상 모델 마련,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으로 해외 임상시험 지원창구 통합 등
- **공공의료 인력·인프라를 확충***하고, **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**을 확대하는 등 **의료체계 대응력 강화**
 - * 지역 공공병원 신·증축, 중증환자 치료병상 및 음압병실 확충, 권역·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(권역 12→15개, 지역 29→35개)
- ② **코로나下 병존 가능한 내수 활성화**를 위해 **'방역우수시설 인증'의 업종(現 식당) 확대·공시 강화, 4+4바우처·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*** 추진
< 방역 안정을 전제로 '21년중에 추진할 계획 >
 - * (문화이용권)온라인 공연 (스포츠이용권·체육쿠폰)온라인 PT (외식쿠폰)포장·배달 허용

- 무착륙 국제비행에 더하여,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해 해외발 관광 비행시 철저한 방역下 착륙후 출국장면세점 이용 허용(21년 한시) **< 방역 안정을 전제로 '21년중에 추진할 계획 >**
 - * (항공편) 상대국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 교류확대가능국가 등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운항 허가 (방역)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구분관리, 면세점 분리 이용 등 방역조치 철저

- ③ 경제·사회 회복력(Resilience)을 위해 속보지표 개선·통합¹⁾ 등 위험 예측 고도화와 감염병 관련 보험개발²⁾, 방역물자 비축 등 완충능력 제고 병행
- 1) 공식통계로 파악이 어려운 실시간 경제상황 포착을 위해 속보지표 pool 개선, 통합지표 개발
2)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등을 보상하는 기업 휴지보험, 계약철회 보상보험 등

【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】

- ① 시중자금 단기화 완화 방안 강구 및 금융권·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
- 국채의 경우 만기 보유시 금리·세제 인센티브 부여, 주식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* 검토
 - * '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'21년 중 제도개선 방안 검토
 - 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 이연에 대비 은행권 대손충당금·자본금을 확충하고,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*
 - *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(DSR 차주단위 전환 및 산정방식 선진화 등, '21.1/4분기)
- ②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127만호(3기 신도시 등) 신속 공급, 전세시장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적극 검토
- 질 좋은 민간임대 건설 촉진을 위해 리츠·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방안¹⁾ 마련, 임대차3법 착근 및 한계임차인²⁾ 지원 등 병행
 - 1) 건설임대에 증부세 합산배제기준 완화(6 → 9억원 이하),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(수도권 6 → 9억원 이하), 공모형 배당소득 분리과세(2억, 9%) 등 **[증부세법 시행령, 지특법 개정]**
 - 2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규모('20년 34조원) 확대(HUG),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개정 등
 - 위기 대응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, 대토보상권 리츠 출자시 양도세 완화* 등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토록 노력
 - *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보유의무를 신설하되, 리츠 출자시 양도세 감면을 상향(現 감면율 15→30%) **[부동산투자회사법, 조특법 시행령 개정]**
- ③ 대외신인도,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美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
- 외환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·보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외환건전성 규제를 점검·보완
 - 美中갈등, 상계관세,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현안 동향을 주시하며, RCEP 조기발효, CPTPP 가입 지속 검토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
 - 식량안보 강화,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곡물(밀·콩)의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, 국가식량계획(NFP) 수립·추진

◇ **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·진작시켜 나가면서 투자·수출 개선 모멘텀 강화**

【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】

① 소비 리바운드(Rebound)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

- '21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**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** [조특법 개정]

* (예) '20년대비 **5% 이상 증가분 / 추가 공제율 10% / 공제한도 100만원**
기본 공제한도(200~300만원<'20년 230~330만원>)와 별도로 한도 추가 ◀

- **승용차 개소세 30% 인하**¹⁾(~'21.6월) 및 **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**²⁾(500억원, '21.3~12)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입증된 정책 지속 추진

1) 현재 개소세 30% 감면은 '20.12월 종료 예정 [조특법 시행령 개정]

2) (예) 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% 환급

② 소비 회복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을 확대(11.5→18조원)¹⁾하고, '21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(예: 상반기)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**先지급**(동의 전제)²⁾

1) 지역사랑상품권(9조→15조원), 온누리상품권(2.5조→3조원) 등 총 18조원

2) 先지급 신청시 : (현행) 7월중 현금 지급 → (개선) 3월 이내 동의를 거쳐 상품권 지급

- 「대한민국 동행세일」¹⁾을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, 민간 주도 「코리아세일페스타」(11.1~15일)²⁾ 적극 지원 등 **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 확산**
< 방역 안정을 전제로 '21년중에 추진할 계획 >

1) 여행·외식·농축수산물 등 연계행사 개최, 판촉비 지원·경품 이벤트 등 인센티브 제공

2) 하반기 수출 연계 글로벌 쇼핑행사로 추진(온라인 할인 확대, 글로벌 홍보)

③ **국내관광 회복**에 대비 5개* 관광거점도시별 교통·숙박 인프라 확충,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(1→4개소)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**< 방역 안정을 전제로 '21년중에 추진할 계획 >**

* (국제관광도시) 부산광역시 (지역관광거점도시) 강릉시, 전주시, 목포시, 안동시

- 지역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·교통·숙박 등을 맞춤형 연계·지원하는 **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도입**(2개 지자체)
< 방역 안정을 전제로 '21년중에 추진할 계획 >

* 교통거점 관광안내,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,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등

-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,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'**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**' 마련

【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·확산】

- ① 투자 회복세 지속에 총력하기 위해 공공·민자·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('20년 대비 +10조원, 공공 60→65, 민자 15→17, 기업 25→28)
- 공공 공공주택, 철도·고속도로·항만 등 SOC 확충,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, 한국판 뉴딜 투자 등
 - 민자 도로·철도 외에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신유형사업 등 신규 민자사업 발굴 및 집행계획 이행
 - 기업 제도 개선,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어로 해소 지원으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
- 설비투자의 경우 '21년 최대 75%까지 가속상각*을 허용하고, 중소·중견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확대(중소 50→70%, 중견 30→50%) [관세법 시행규칙 개정]
- * (중소중견) 사업용고정자산 75% (대기업)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50%
- ② 첨단산업,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예외인정,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
- 첨단산업 ▶ 해외사업장 축소기준(現 25%이상) 및 동일제품 생산기준(現 동일 소분류)에 대한 예외 인정
 - 유턴 ▶ 비수도권 첨단 투자시 유턴 보조금 추가 지원(+2%p → +5%p)
 - 협력형 ▶ 2개이상 기업이 수도권의 지역으로 동반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완화(25%→10%이상)
 - 유턴 ▶ 지원비율 최대 5%p 상향 조정(現 지역별로 투자액의 21~44%)
-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(유턴지원위원회 의결) 개별협상을 거쳐 현행 지원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
- *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 최대지원 검토(인정요건 유연적용, 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+5%p 인상 등)
- ③ 생활 SOC 투자를 11.0조원으로 확대*하고('20년 대비 +0.5조원), 공공 청·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지속
- * 생활SOC 복합화 사업 438개 선정,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결합 등 사업방식 다각화

【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·강화】

- ①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'격리면제서' 접수절차 통합·개선*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('20년→'21년말) 추진
- *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, 제출서류 통합·개선
- 중소·중견기업에게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%¹⁾ 및 '21년 선복량 증가분중 45%(긴급 화물항로 중심)를 우선 제공²⁾하고, 장기운송계약 체결³⁾ 지원
- 1) 국적선사 임시선박(8천TEU) 월 2척 이상 추가 투입(~'21.2, 필요시 연장)
2)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 '21년중 1.6만TEU급 8척(13만TEU 규모) 1분기내 조기투입 유도
3) 우수 선·화주 인센티브 제공(가점 확대 등), 중진공의 장기운송계약 대행 등 추진

- ②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,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무보 보험·보증 만기연장 기간 확대(~'21.6) 등 금융지원 강화
-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 지원(기업당 1천만원 한도)
 - * 오프라인 전시회 샘플 배송(편도) 지원 → 온라인 전시회 포함, 사후관리용 추가 발송분도 지원
 -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, 네덜란드 등 공동물류센터*를 개장하고, 국내기업이 저렴한 비용(50~80% 수준)으로 이용
 - *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('21.3), 로테르담·바르셀로나항('21.9 잠정)
- ③ FTA·양자경협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 및 對개도국 경제협력·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* 마련('21.2)
- * (예) 對개도국 민간기업 대출, 보증 기능 강화 등

3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

◇ **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,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뒷받침**

【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】

- ①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중대 세액공제 제도를 '21년 한시 개편, '20년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, 공제혜택 지속 제공
- * (현행) '20년 고용 감소시 '19년 고용 증가 공제 혜택 중 '20년 고용감소분 추징 +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미적용
- 내년 1/4분기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* 지정기간(~'21.3) 연장을 검토하고, 필요시 추가 고용대책 적극 강구('21.1/4)
 - *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수업, 공연업, 항공기취급업, 면세점, 전사국제회의업, 공항버스
→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'21.2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
 -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(78만명, 1.4조원)을 지속 지원하고, 무급휴직지원금 요건 완화, 파견·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('21.1)
- ② 특히,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명(비대면·디지털 등 민간 8만, 공공 2만)으로 확대 지원
- * (민간) '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, '지역주도형 일자리 2.6만명' 등 8만명 지원
(공공)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2.2만명까지 확대('20.9월말 현재 1.4만명)
- 공공기관별 내실화 계획 수립,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, 디지털신기술 직업훈련 연계¹⁾, 채용시 우대²⁾ 등 일 경험 내실화 병행
- 1) K-Digital Credit(1인당 50만원, 내일배움카드)과 연계, 기초 코딩·빅데이터 분석 등 직무훈련 지원
2) '21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시 5% 이상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 등

- 공공기관 **‘청년고용의무제’**를 연장(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)하고, 안전·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 중심으로 **공공기관 신규채용** 규모도 확대(‘21.1월 발표)
 - *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% 이상씩 청년(15~34세 이하)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
- **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**을 유도하기 위해 **청년 일경험 활성화** 노력을 「ESG 가이드스*」(한국거래소)에 반영
 - *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토대로 작성하는 권고지표
- ③ ‘21년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(25.5 → 30.5조원)의 경우 조기집행관리 대상을 선정(14조원^{잠정})하고, 그 중 **5조원^{잠정}을 1/4분기에 조기 집행**
 - 특히, **직접일자리** 사업에 3.2조원 예산을 투입, 취약계층 일자리를 **104만개**(‘20년 본예산 95만명) 제공하고, 그 중 **50만명 이상을 1월중 채용**
 - 국가직(일반직) 공무원도 **3/4분기까지 70% 이상 채용**(‘20년 3%)

【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】

- ①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·계층에 대한 **3조원+α** 규모의 **맞춤형 지원**은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시기·대상·규모·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
- ② **착한 임대인**에 대해 **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¹⁾**, 세제지원·국공유 재산 등 임대료 인하 연장²⁾ 등 상생협력 등을 통한 지원 확대
 - 1) 소진공 정책자금 외에 신보, 기은에서도 착한 임대인에 한해 부동산업종 포함 추진
 - 2) (국유재산·공공기관 소유재산) ‘21년 6월말까지, (공유재산) 임대료 부담 완화 지속 유도
- 소상공인 **전기요금 납부기한**을 추가 연장하고(∼’21.3월), **신고내용 확인 면제·정기조사 유예** 등 **세무검증 배제조치** 연장(∼’21년말) 등도 병행
- 영세·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, **합리적인 개편방안** 마련(‘21.12)
-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**자영업자¹²³ 대상 확대***하고, 캠코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의 기간 연장(∼’20.12 → ∼’21.6)
 - * (현행) 업력 1년 이상 → (개선) 코로나로 인한 휴폐업자(‘20.2월 이후)는 업력과 무관히 채무조정 지원
- ③ **희망리턴 패키지**와 연계 운영중인 「**성공불 용자**」 대상에 **비대면 사업**을 포함하는 등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
 - * (현행) 비과밀 업종 지원 → (개선) ‘비대면 혁신적 아이디어는 업종무관 지원 추진

【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】

- ① **기업 경영애로 해소**를 위해 **저신용 회사채·CP 매입기구**의 매입 연장을 추진(∼’21.1→7월)하고, P-CBO 발행·저신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 지속
- **중소·중견기업 정책금융(대출·보증)도 302조원**까지 확대(‘20년 대비 +16.9조원)하고, **신보 공동보증프로그램***도 **3천억원**으로 확대
 - * 제조업·부품 등 협력관계 기업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보증 일괄심사 지원(‘20년 300억원)

② **코로나 이후 사업재편 활성화**를 위해 **수요·공급 공동 사업재편 3종 인센티브** 제공(세제·R&D·정책금융上 우대)

과세이연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(4년거차·3년분할) 요건 완화[조특법 개정]
R&D 사업재편 펀드('21년 200억원) 매칭, 전용 R&D('21년 100억원) 우선 지원 등
정책금융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과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병행

- 또한,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 유지를 위한 **부채비율 요건 완화¹⁾**, **등록면허세 감면(50%) 대상 합리화²⁾** 등 기존 사업재편 제도 개선

1) (예시)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따른 사업용 설비 → 사업용 건축물도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
 2) 과잉공급 해소 및 생산성 향상 투자 한정 → 신산업 사업재편 기업 등 확대 [지특법 개정]

- **선제적·신속한 사업재편**을 위해 **심의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**하고, **기존 설비 매각시 캠프 先매입('21년 시범)**, **유휴설비 유통 지원규정 신설**

③ **포스트 코로나**를 대비한 **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**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

* 시장성 차입을 감안한 주채무계열 제도('20.12월 개편) 등 모니터링 체계 적극 활용, 기촉법·기활법·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점검 등(관계부처 TF 운영)

【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(지역균형 뉴딜)】

① '21년중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의 성과 가시화 본격 추진

- **한국판 뉴딜 지역사업**은 사업 선정시 **균형발전 요소**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, **디지털·그린 분야**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('21.1.) 등 신속 확산
- **지자체 주도형 뉴딜**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,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('21.1~) 등 집중 지원
- **공공기관 선도형 뉴딜**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등 성과 창출 지원
- ☞ **지역균형 뉴딜의 장애요소·제도개선 사항을 발굴**하고, **신속한 협의 추진**을 위해 「**제도개선 Fast-Track**」 도입

② **지역경제 재생**을 위해 **균형발전 프로젝트¹⁾**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, **‘산단 복지 멀티플렉스’ 시범사업²⁾** 등 **환경개선** 추진

1) 19개 SOC 설계·착공, 4개 R&D 실증·사업화 공정의 차질없는 지원
 2) 산단내 단일 건축물에 다수 근로자 복지시설 입주하는 방식('21년중 2~3개소 시범사업)

③ **지역소멸 대응,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**을 위해 **농촌인구유입** 지원, **한국판 뉴딜 구현 공간화**, **신기술 적용** 등 **다각적 방안** 마련

- **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**을 위해 **청년마을 확대** (1→12개소)*하고, **귀농·귀촌 지원정책을 통합·맞춤형**으로 개편(~'23년)

* 인구감소지역에 주거·교육 및 커뮤니티·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정착 지원

- **농촌공간 정비시 디지털 기반 구축, 스마트팜 AI 경진대회** 등 **스마트팜 확산** 및 **온라인 거래품목 확대** 등 **농축산물 수급 스마트화** 추진

- ◇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ICT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 하면서 벤처, BIG3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전반 혁신 강화

【디지털 혁신경제 선도(디지털 뉴딜)】

- ◇ 디지털 뉴딜을 위해 '21년중 총 12.7조원을 투자하고,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, 6G 기술선도, 비대면경제 육성 등 병행

- 1] **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초 인프라 정비**를 위해 데이터 특위(4차 산업혁명委内) 신설 등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
 -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, 관련 산업 육성 및 분쟁조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
 - 산업별 빅데이터('21년 16개분야), 금융·의료·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**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*** 등 **데이터 활용 강화**
 - * 유동인구,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 경영에 밀접한 데이터 확보 등 지원
- 2] **5G 확산 가속화**를 위해 5G 설비투자 취득비·공사비도 세액공제를 **2%p 우대***(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), **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** 투자에도 지속 적용
 - * (대기업) 1→3%, (중견기업) 3→5%, (중소기업) 10→12% [조특법 시행령 개정]
 - **6G 핵심기술 확보**를 위한 6대 중점분야(초성능·초대역·초정밀·초공간·초지능·초신뢰) R&D 투자('21~'25년), 표준 특허확보 지원 등 노력도 병행
- 3] **AI 활용 촉진**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·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 추진('21.下) 및 중소기업·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 지원
 - AI가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자동차 등 핵심산업, 보건, 공공 서비스 등 산업별 AI 특화기술*을 개발, 실증사업 추진('21.1~)
 - * (핵심산업)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 (보건) 암 전문 병리진단 등 (공공) AI 기반 정부서비스 안내 등
- 4] **비대면 경제를 선도**하기 위해 의료·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, 어르신·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
 - * (스마트병원) 3개 추가구축, 환자안전·의료질 제고를 위한 ICT 활용 의료서비스모델 개발 등 (돌봄로봇) 이동보조기구 탑승, 욕창예방, 배설 및 식사보조 등 지원
 - 도로·철도, 공항·항만, 수자원,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등 뉴딜사업 가속화('21.1~)
 - * 목표(예시) : (도로·철도) 국도 45%에 ITS(지능형 교통체계) 구축(~'21)
(수자원) 국가하천 57%에 배수시설 자동·원격제어 시스템 설치(~'21)

⑤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(21.3), 뉴딜분야 대상 17.5조원+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 뉴딜금융 본격 확산

정책형 뉴딜펀드	4조원 규모 자펀드 본격 투자, 운용사의 적극적 투자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체계 개선(3년차부터 관리보수를 약정액이 아닌 투자잔액기준 지급 등)
인프라 펀드	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신속 완료
민간 뉴딜펀드	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“뉴딜지수” 개발활용(한국거래소), 관련 ETF·인덱스펀드 등 “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” 출시 유도

-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 대출,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등 뉴딜분야에 특화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신설

【벤처·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】

①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‘K-테스트베드’ 체계를 구축하고, 우수제품은 혁신조달시 우대·해외진출 등 연계 지원

* (예) K-테스트베드^{공항공사} : 항공·관제 기술, 안티드론기술 분야 등
 K-테스트베드^{한국수자원공사} : 수력·친환경 에너지 기술, 댐 관리 기술 분야 등

- ‘공공기관 접수→실증장소 제공→확인서 발급’ 등 One-Stop 서비스 제공, 공공기관 참여 유도, 민간기업은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참여 인센티브 부여

②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 지원(현지조사, 투자자 매칭 등),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·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

-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비자 발급요건을 개선*하고, 해외지재권 보유도 창업비자점수로 인정

* 기술창업비자 등 발급시 국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발급

③ 벤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(은행)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(벤처법 개정)

- K-비대면 혁신벤처 200개 발굴,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, K-유니콘 프로젝트 등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이행

- 벤처 R&D 활성화를 위해 정부 R&D사업 지원심사시 상환전환 우선주*를 통한 부채도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

* 만기시 투자금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,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(현재 전환사채 등의 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)

④ 포스트 코로나,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고려해 창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‘창업지원 3개년 계획’ 수립(21.6)

【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】

- ① **BIG3의 본격적 성장동력화**를 위해 혁신기업 1,000 프로젝트와 연계, 대·중소 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, 「**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***」로 강력 추진
 - * 경제부총리(위원장), 과기산업·중기·복지·금융위(5개부처 장관) 및 산업별 기업전문가 참여
 - **BIG3 지원**을 위한 **기존과제·추가 보완과제**들도 차질없이 추진
 - 미래차** 자율주행드론 상용화 대비 제도 정비, 전기·수소 충전인프라 구축, 미래차 펀드 조성(2천억원) 등
 - 바이오**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, 메디푸드 등 5대 그린바이오 집중지원,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
 - 반도체** 신개념반도체(PIM) 기술개발 추진, 500억원 규모 차세대반도체 펀드 조성, 첨단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,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 추진
- ② **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D.N.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면서 K-스마트 등대공장 구축, 3대 제조분야* **로봇화** 등 적극 추진
 - * 금속가공, 자동차부품, 전기·전자 3대 분야 지능화 및 로봇화 지원
 - **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**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**입지 인센티브**를 제공하고, **경제특구간 연계·협력 강화** 등 **경제특구 효율성 제고방안** 강구
- ③ **소부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연내 공급 안정화** 완료, 글로벌 진출 '**소부장 으뜸기업**' 20개 이상 선정 등 **소부장 20 성과 확산**
 - **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확대(32→57개)**하고, **미래 핵심품목***을 선제 발굴하여 **도전적 R&D**를 지원하는 등 **GVC 재편**에도 선제 대응
 - * (예) AI 반도체, 전고체전지, 마이크로 LED, 상온초전도체, 위상물질 등

【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】

- ① **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** 입법 조속 추진 및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전환*에 대응하기 위한 **중장기 비전·전략** 마련('21.1/4)
 - * 코로나 팬데믹, 신기술 발전, 인구구조 변화, 서비스교역 확대 등
 - **한걸음 모델**은 **기재부** 규정에 **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**를 마련, **제도화***('21.1)하고, **1분기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·추진**
 - * 「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·운영 규정」에 **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포함**하고,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제·개정 추진
- ② '**문화강국 도약**'을 위해서는 **한류행사와 K뷰티** 등 연관산업을 연계 하는 등 **한류성과를 지속 확산**시키기 위한 **전방위적 지원** 추진
 - **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** 등 비대면 온라인 **예술활동*** 및 특색있는 **지역문화**에 기반한 **문화도시 조성** 등 **문화예술 인프라 지원**도 병행 추진
 - * 온라인 전용 K-POP 공연장 조성 박물관 온라인 전시 국립극장 등 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등
 - **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확대***, **청년·신진 예술인 창작활동비** 지원 및 **코로나 피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펀드(250억원)** 등 **창작기반도 확충**
 - * ('20) 171만명, 1인당 9만원 → ('21) 177만명, 1인당 10만원

- ◇ **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대로 본격 이행하면서 사람투자 등 생산성 제고 노력으로 미래에 선제 대비**

【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 전환(그린뉴딜, 탄소중립)】

- ◇ **그린 뉴딜을 위해 '21년중 총 13.2조원**을 투자하고, 그린 뉴딜 및 **2050 탄소중립**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**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** 등 병행

- ① **2050 탄소중립 3+1전략 본격 추진**을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, 탄소중립 시나리오(21.上) 토대로 **핵심정책(20여개) 추진전략 수립·시행(21.下)**

경제구조 저탄소화	에너지 전환 가속화(신재생에너지로 주공급원 전환, 인허가 통합 One-stop shop 구축), 고탄소 산업 혁신(제조업 르네상스 2.0), 미래모빌리티 가속화(친환경차 전환, 충전기 등 인프라 완비), 도시·국토 저탄소화(탄소중립도시, 국토계획에 탄소중립 반영)
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	新유망산업 육성(저탄소 신산업, 기후산업), 혁신생태계 저변구축(그린 혁신기업 육성,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), 순환경제 활성화(폐자원 순환망 구축)
공정(공정) 전환	취약산업계층 보호(사업재편 촉진 및 재취업 지원), 지역중심 탄소중립(지자체 역량강화), 국민인식 제고(국민 대상 환경교육·홍보 강화)
제도적 기반 강화	재정제도 개선(기후대응기금 조성,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), 녹색금융(정책금융 확대, 공의무 확대 등), 기술개발(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US) 등 핵심기술 집중 지원), 국제협력 강화

- ☞ 산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·지지를 확산하고, **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**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 노력

- ②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**저탄소·친환경화 가속화**를 위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(8.3만호) 그린스마트 스쿨(761동) 구축 등 지속 추진

- 기술개발·생산·판로까지 연계하는 5대 선도분야*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, 2차 「그린뉴딜 유망기업」 30개 지정 등 **녹색산업 본격 육성**

* ①청정대기, ②생물소재, ③수열에너지, ④미래폐자원, ⑤자원순환

- **녹색에너지 확산**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, 스마트 전력망(138.5만호) 구축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속 추진

- **해양 플라스틱 제로화**를 위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신규투입(7척),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* 등 추진

* 드론 활용 확대,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

- ③ **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**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-녹색분류체계를 도입,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 허용

-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 마련

【사람투자·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】

◇ 한국판 뉴딜 **사람투자**를 위해 '21년중 총 0.8조원을 투자하고, 사람투자의 효과 제고를 위해 **직업훈련제도의 혁신 노력** 등을 병행

- 1] **디지털·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명 양성**(~'25) 프로젝트를 본격화 하고('21년 3.6만명), **직업훈련과 뉴딜·산업간 연계** 등을 강화
 - * (AI·소프트웨어) 1.6만명. (녹색융합 기술) 0.3만명, (미래형 핵심 실무) 1.7만명
 - 디지털 선도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, 직업훈련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산학연 협업 확대
 - 산업계에서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계 주도형 인재양성을 도입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마일리지화, 우수기업(연 100여개)에 인센티브* 제공
 - * 공공입찰 가점부여, 산업부 및 중기부 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
- 2] **포스트코로나 시대 직업훈련 효과성**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모든 직업훈련 정보를 One-Stop으로 제공, 성과중심 직업훈련* 시장으로 개편
 - * ①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, ②평가자 다양화(現 심평원 단독 통합심사)
 - 평생교육·직업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('21.下)
- 3] **규제 혁파** 등을 통해 **한국판 뉴딜을 뒷받침**하기 위해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이행

디지털	산업, 中企 등 분야별 데이터 활용 지원 법률 제정(산업디지털 촉진법 제정), 생활물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(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) 등
그린	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(신재생에너지법 개정), 재생에너지 직접거래(PPA) 허용(전기사업법 개정) 등
안전망	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(고용보험/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),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마련(디지털포용법 제정) 등

- **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¹⁾ 해소**를 위해 법령정비까지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등 **규제샌드박스 5법²⁾ 신속 정비**
 - 1) 임시허가(법령정비시까지 연장)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(2+2년)후 종료 → 실증특례 기간(2+2년)내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사업중단 우려
 - 2) 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, 금융혁신법, 스마트도시법, 정보통신융합법
- 4] **R&D성과 제고**를 위해 다부처 공동R&D 과제를 확대('21년 6.6%)하고, 초고난도 연구의 자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'혁신도전 프로젝트' 추진
 - 정부R&D 참여 연구비의 민간부담률을 하향*하고, 선도기업 중심으로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R&D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간 R&D도 촉진
 - * 민간부담률 : (중견) 40~50% → 35%, (중소) 25~35% → 20%(창업성장 등은 최대 10%)

【재정·공공·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】

- ① **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·공정성 제고**를 위해 「**한국형 재정준칙**」
법제화와 함께 **조달·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** 등을 종합 추진
 - **신산업·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***, **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** 등
‘공공조달 3개년 계획(‘21~‘23)’ 수립(‘21.6)
 - *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,
계약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시대 맞춤형 계약제도 발굴
 - **국유재산 효율 제고**를 위해 **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** 및
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, 공원으로 활용,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
- ② **공공기관 경영합리화**를 위해 **타당성 재조사제도***를 법제화하고,
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**중소기업 기술지원** 등을 지속 확대
 - * 공공기관 대규모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 증액 발생시 타당성을 재조사
 - **연료비 등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** 검토
 - **공무직위원회**를 통한 **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** 등을 토대로
임금격차 완화 등 **공무직 처우개선** 등도 병행
- ③ **주52시간 현장안착** 지원을 위해 **취약기업 점검(5~49인 기업), 노무관리**
지도, 탄력근로제 확대(3개월→최대 6개월) 등 **노동시장 상생여건 조성**
 - **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**을 위해 **임금정보** 등을 지속 제공하고, 공공기관
중심으로 **직무급 도입수준 평가**로 **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화**

【인구감소·저출산 대응 강화】

- ①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」, **제3기 인구정책 TF** 등을 통해
인구감소 충격 완화, 구조변화 대응 등 노력 강화
 - **여성 및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,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**
경쟁력 제고, 지역소멸 대응 등을 중심으로 **과제들을 적극 발굴**
 - **유아보육의 질 제고, 부담 경감을 위해 0~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**하고, **난임치료**
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휴가 확대(최대2→3일) 및 민간부문 제도개선 방안 검토
 - * 보육료 지원단가(천원/월) : (0세) 970 → 1,012, (1세) 686 → 713, (2세) 527 → 547
 - **6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·중견기업 인건비**
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(중소 10→30%, 중견 5→15%)
- ② **고령사회 적응력 제고**를 위해 ‘**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***’ 도입,
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, **고령자 고용 활성화** 논의도 본격화
 - * (예)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

◇ 고용·사회 안전망 기반 위에 코로나시대 고용·교육격차 해소 노력으로 포용국가로의 전환 가속화

【고용·사회 안전망 확충】

◇ 고용·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'21년중 총 5.4조원'을 투자하고, 포용국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, 4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병행

1]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취업·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*를 본격 시행('21.1~)하는 등 **고용·사회 안전망 강화** 노력 지속

* I 유형(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) : 40만명, II유형(現 취업성공패키지) : 19만명

○ 특고, 지역업자 등을 위한 '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'을 수립하고, 그 이행을 위해 소득파악 주기 단축, 기관간 소득정보 공유 등 소득파악체계를 개선

○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 등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,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('21.1~) 등도 차질없이 추진

2] 특고·프리랜서 금융접근성 제고, 서민 금융부담 완화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등을 위해 취약계층 **금융안전망 3중세트** 구축

○ 안정적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, 프리랜서가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통하여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도록 하고('21.6), 햇살론 지원요건도 완화*('21.2)

* 대출전 2개월간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 → 6개월로 확대

○ 실직·질병 등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복지·고용 서비스 안내(대위변제 前)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 연계 강화('21.3)

○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확대를 위해 대부업·저축은행 등 저신용·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*하고,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('21.7)

* (예)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

3] 취약계층을 위한 **4대 사회안전망**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**확충**

생계	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'21년 노인·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'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의료	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, 흉부초음파·심장초음파·척추MRI 등 급여화
주거	청년(4.5→5.4만호), 신혼부부(5.2→6.0만호) 등 중심으로 공적임대 확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신설(3.1만 가구)
교육	고교 무상교육 전면적 실시(23학년—전학년), 저소득층 교육급여·장학금 등 확대

【코로나시대 격차 해소】

- ①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용·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5개 분야 **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** 마련('20.12)

돌봄	아이돌보미 종사자·사업주 준수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장애인 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('20년 시간당 13,500 → '21년 14,020원)
보건	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(일 5만원)·교육수당(15만원) 지급
배달·대리기사	배달업 인증제 우선 도입 후 등록제 법제화 검토, 보험제도 합리화 추진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 구축('21.1)
환경미화	재활용품 전용차량 사용기준 마련, 100L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제한, 재활용품 선별원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
콜센터	휴게시간 명시 등 관리지침 개선, 체온계·칸막이 등 방역설비 지원 및 근로·안전감독 실시

- ② **교육격차 완화**를 위해 **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,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도 인하**(연4.5% → 2~3% 수준)

- 학교내 다중지원팀(담임, 상담교사 등)과 외부 학습센터간 연계 강화, **또래간 학습도우미(또래 튜터) 활동 장려** 등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
-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**온라인 교육 지원효과를 높이기** 위해 국가기관 소유 양질의 불용 PC·프린터를 직접 배송·설치, 지자체가 수혜자를 매칭하도록 개선('21.3)

* (현행) 국가기관(기부기관)외 지원단체를 별도로 선정, 지원단체가 수혜자에게 전달
→ 배송·설치 및 수혜자 선정 등을 지원단체가 부담하여 운영상 어려움 존재

- ③ 아동→청소년→청년→노인 등 **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 확충**

아동	발달장애 영유아 조기진단·치료를 위한 조기개입서비스(매뉴얼 개발 및 배포 의무화, 건보 빅데이터 활용 조기발견모델 구축 등)를 추진하고,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확대(71→81개)
청소년	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해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확대(9→15개), 심터 청소년의 자립지원 활동비 (입소시 : 최대 50만원, 퇴소시 : 월30만원×최대 36개월) 등 신규 지원
청년	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, 대학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직접 운영(1,500호),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확대(2.3→2.5조원)
노인	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(소득 하위 40%이하 → 70%이하) 치매국가 책임제 완성을 위한 비대면 치매검진 등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

- ④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, 농어민 등 **취약계층지원 확충**

장애인	장애인 일자리 확대(2.2→2.5만명),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확대(75→90개소) 장애인 연금지급 단가 인상(25→30만원), 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(0.6만명)
여성	경력단절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,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·전담팀 운영 등 경력단절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
농어민	연금보험료 지원 확대(월 최대 43,650 → 45,000원) 고령어업인, 소규모어선, 친환경양식 대상 수산공익 직불제 도입

【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】

- ① **공정경제 3법 입법**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, 경제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제도 착근노력 강화
 - 적용대상·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(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) 등 시행령 제·개정을 추진하고, **하도급·가맹점·대리점 보호***를 지속 강화
 - *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, 가맹종합센터 개소, 표준대리점계약서 업종 확대 등
 - ② 「**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**」 제정*,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·제도 개선 등을 통해 **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**
 - * 계약서 작성·교부의무,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, 표준계약서·분쟁조정제도 등 도입
 - **대·중소 상생 촉진**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진행 중인 상황에서 **대기업 선제 진출** 등을 막기 위한 **일시정지 권고제도 도입방안 마련**(21.11)
- ③ **사회적경제 육성**을 위해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범부처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*하고, **사회투자펀드를 확대**(250→500억원)
 - * 부처 협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, 분야별로 ①역량진단, ②기초역량 강화(맞춤형 교육) 후, ③성장 집중지원(R&D·판로 등)

【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】

- ① **개인형 이동수단 제도개선**(^①교통), **첨단기술**(드론 등) **활용 화학사고 원격감시**(^②산재), **코로나19 확진자 등 고위험군 상담**(^③정신건강) 등 **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** 지속
 - * 「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, 단체 보험 개발 등
 - **재난 대응능력 강화**를 위해 디지털 기술(IoT) 기반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*(21.12) 및 교량·육교 등 노후·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*(21.1) 구축
 - * 급경사지,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위험상황을 실시간 관측계측 → 문자 알림, 마을 경보 등 제공
 - **지역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 대책**을 추진(21.6)하고, 사업장·노후차량 등 대상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·**운행제한** 등 이행지원 확대
 - * 소규모 사업장 배출방지 시설 지원(3,000개소),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(34만대) 등
- ② **국민 삶의 질 제고**를 위해 **매장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가격 표시제***를 단계적으로 도입(21.3/4)
 - * 이·미용업·학원업 既시행중, 체육시설업 등 우선 검토후 적용업종 확대 추진
 - 배달앱, 렌터카 등 민원이 빈번한 생활밀착형 시장의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·개정 등 **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**

IV. 2021년 경제전망

◇ 내년은 금년보다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,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 전망

- ① (성장) '21년 GDP는 금년 역성장($\Delta 1.1\%$)에서 벗어나 **3.2% 성장** 전망
 - 글로벌 교역·반도체 업황 개선,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**내수·수출의 동반 개선** 예상
- ② (고용) 경기 개선, 일자리정책 효과 등이 일자리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취업자수는 **15만명 증가** 전망
 - 취업자 증가 전환에 따라 고용률(15~64세)도 '20년(65.8%)보다 소폭 개선된 **65.9%** 예상
- ③ (물가) 수요 회복,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'20년(0.5%)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**1.1% 상승** 전망
- ④ (경상수지) 수출 개선과 함께 수입도 큰 폭 증가하면서 '21년 흑자규모는 **630억불** 수준 예상
 - 수출(통관)은 반도체·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**8.6% 증가**, 수입(통관)은 **9.3% 증가** 전망

2021년 경제전망

	2020년	2021년
■ 경제성장률(%)	$\Delta 1.1$	3.2
■ 취업자증감(만명)	$\Delta 22$	15
- 고용률(% , 15~64세)	65.8	65.9
■ 소비자물가(%)	0.5	1.1
■ 경상수지(억불)	680	630
- 수출(% , 통관)	$\Delta 6.2$	8.6
- 수입(% , 통관)	$\Delta 7.5$	9.3

[부록]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한 2021년 실행계획

① [디지털 뉴딜]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① D.N.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데이터 시장 규모	16.9조원('19말)	24조원	43조원
▶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(누적)	10개	16개	30개
▶ AI학습용 데이터 구축·개방(누적)	191종	341종	1,300여종
▶ 빅데이터 구매·가공 바우처(누적)	3,680건	6,260건	18,000여건
▶ 5G 보급률	21.2%	33.4%	70%
▶ 인공지능 바우처(누적)	214건	414건	3,400여건
▶ AI 전문기업 수	56개('19말)	83개	150개
▶ 모바일 신분증	공무원증	운전면허증	추가 확대
▶ 5G 국가망	5개 기관 시범	5개 기관 시범	전체 정부청사
▶ 행정·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	17%	20%	100%
▶ 공공서비스 디지털전환	-	①중앙부처·지자체 ②기존 복지수급자	①공공기관 등 ②전국민 확대

② 교육·의료·근무 등 생활 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스마트 병원모델(누적)	3개	6개	18개
▶ AI기반 정밀의료	8개 질환	8개 질환	20개 질환
▶ WiFi 구축 교실 수(누적)	8.2만실	27.2만실	35.2만실('22)
▶ 온라인콘텐츠탑재(누적)	1,500개	1,800개	3,500개

③ 주요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C-ITS 구축(누적)	시범·실증	1,900km	30,000km
▶ 정밀도로지도(누적)	주요 간선도로 6,700km	주요 간선도로 18,370km	주요 간선도로 33,810km
▶ 스마트댐 안전관리(누적)	-	11개소	37개소
▶ 지하구조물 3D 지도(누적)	52개市	85개市	85개市+77개郡
▶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(누적)	170개소	340개소	510개소
▶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(누적)	-	20개소	100개소

② (그린 뉴딜)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·저탄소 전환 본격화

① 녹색인프라 :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·친환경화 확산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(누적)	1천여동	2천여동	2천여동
▶ 그린스마트 스쿨(누적) (에너지 자립률 20% 이상)	-	761동	2,835동
▶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(누적)	-	25개	25개
▶ 노후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(누적)	0.9만호	9.2만호	22.5만호
▶ 친환경·에너지절감형 국민체육센터(누적)	-	51개소(~'22)	51개소
▶ 정부청사 ESS 개선(누적)	1개소	4개소	17개소
▶ 광역 스마트상수도 구축(누적)	9개소	23개소	48개소
▶ 지방 스마트상수도 구축(누적)	-	44개 지자체	161개 지자체

② 녹색에너지 : 지속가능 에너지믹스 전환+친환경 모빌리티 확대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(누적)	60만호	198.5만호	520만호
▶ 친환경 도시발전(누적)	14개('19말)	33개	56개
▶ 재생에너지 설비용량(태양광 풍력)(누적)	13.3GW('19말)	21.9GW	42.7GW
▶ 수소전문기업(누적)	-	최초 지정	100개 지정
▶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	3.7만가구('19말)	4만가구	20만('21~'25)
▶ 전기차(누적)	13.4만대	23만대	113만대
▶ 수소차(누적)	1.1만대	2.6만대	20만대
▶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(누적)	106만대	140만대	222만대
▶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(누적)	1.5만대	3.5만대	15만대
▶ 전기차 충전인프라(누적)	3.3만기	3.6만기	4.5만기
▶ 수소차 충전인프라(누적)	72기	188기	450기

③ 녹색산업 생태계 : 산업부문의 녹색전환 가속화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스마트 그린산단(누적)	4개	7개	15개
▶ 스마트에너지 플랫폼(누적)	7개 산단	7개 산단	10개 산단
▶ 유망기업 선정·지원(누적)	41개사	71개사	100개사 선정
▶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(누적)	11개소	41개소	100개소
▶ 클린 팩토리(누적)	100개소	400개소	1,800개소
▶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(누적)	4,000개	7,000개소	13,000개소
▶ CCUS 실증·상용화 기반 구축(R&D)	중규모 CO ₂ 저장소 확보 CO ₂ 활용 기술 실증 모델 개발	중규모 CO ₂ 저장 공정 기술 개발 CO ₂ 활용 기술 파일럿 실증 공정 설계	중규모 CO ₂ 저장 실증 기반 구축 완료 CO ₂ 활용 기술 실증 공정 시운전 및 시험생산

③ [안전망 강화] 사람중심 포용국가 구축

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국민취업지원제도 I 연간 지원자수	-	40만명	50만명
▶ 고용보험 가입자수(누적)	1,426만명	1,500만명	2,100만명
▶ 특고산재보험 가입자수(누적)	16.6만명	70만명	70만명+α
▶ 산재사고 사망자수(1만명당)	0.46(19년)	0.38	0.2
▶ 생계급여 수급자수(누적)	99.7만 가구	110만 가구	113만+α 가구

② 사람투자 확대

주요사업(성과지표)	'20년말	'21년	'25년
▶ AI·SW 핵심인재 양성(누적)	1.4만명	3만명	10만명
▶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(누적)	1천명	4천명	2만명
▶ 미래형 핵심인재 육성(누적)	-	1.7만명	18만명
▶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비중	7.1%	10%	20%
▶ 농어촌마을 인터넷 망(누적)	650개	1,224개	전체 마을

④ [지역균형 뉴딜]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

'20년	'21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역균형 뉴딜분과 등 추진체계 정립 ▶ 지방채 발행지원 등 인센티브 구체화 ▶ 지자체 뉴딜계획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 집중 지원 ③ 공공기관 핵심 선도사업 본격 추진

※ 재정투자, 민간자본 활용, 법·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성과확산 적극 뒷받침

재정투자	민간자본 활용	법·제도 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년 21.0조원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지털 : 7.6조원 - 그린 : 8.0조원 - 안전망 강화 : 5.4조원 ▶ 10대 대표과제 + 안전망 투자에 80%(16.8조원) 집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4조원 목표로 정책형 펀드 본격 출시 ▶ 뉴딜 정책금융 17.5조원 + α 공급 ▶ 기업 및 민간투자 등 민간참여 적극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'21.2월까지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15개 법안은 조속히 입법 추진 ▶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